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 대표성 확대

I. 들어가기

- 우리나라의 여성 정치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여성의 낮은 정치대표성은 성인지적 입법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성문제의 이슈화 부재, 다양한 '여성'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중요함.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의 낮은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의 의사결정', 즉 정치참여 부문의 낮은 지위는 결국 저 대표성의 문제임. 여기에 덧붙여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여성 국회의원, 여성 국무위원, 여성 지도자의 숫자상 대표성 확대와 어떤 여성 후보자를 배출하고, 진입시키는가의 부분임.
- 달럽(Dahlerup, 1988)은 전체의석 중 여성 의원이 30%를 차지하는 때가 여성의 목소리에 힘을 갖게 되는 때라고 했으며, Kanter의 임계치(critical mass)이론에 의하면

여성의 과소대표성, 남성위주의 정치상황에서는 여성 정치인이 최소한 15%가 되어야 정치문화의 변화, 여성을 위한 정책·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폭넓은 의미의 '정치 영역'에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의 문제이며 젠더 관계의 변화를 통한 양성평등한 정치 문화 조성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님. 전 세계적으로 2015년 22.1%에 불과한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각국은 나름의 여성 정치대표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내외 여성정치대표성 현황 및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여성 정치대표성 확대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II.

국내외 여성 정치대표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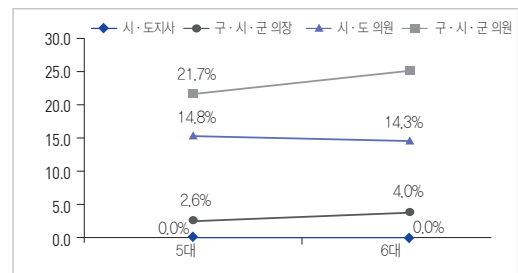
1. 국내 현황

- 100% 남성으로 개원한 후 제19대 국회까지 여성 의원 총 181명
- 1948년 제헌국회는 100% 남성으로만 개원. 보궐선거를 통한 제헌국회 진입에서 현재 19대까지 여성 국회의원은 단 181명에 불과함. 비율로 살펴보면 단지 3.8%임.
- 2004년 '여성 할당제' 도입 이후 여성 의원 비율은 5.9% (16대 국회)에서 13%(17대 국회)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19대 여성 국회의원은 15.7%(47명)로 그 증가폭이 매우 적었음.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대표성 현황을 여성의원 의원 비율로 살펴보면 국회의원 15.7%, 광역의회 14.8%, 기초의회 21.6% 수준으로 매우 저조함.
- 1대부터 16대까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5석을 넘지 못했으며, 17대에서 처음으로 두 자리 수 의원을 기록했으나 명수로 본다면 17대 10명, 18대 14명, 19대 19명으로 아직까지 매우 저조한 상황임. 단, 16대 이후 비례에서 50% 이상으로 선출되어 여성의원수가 13% 이상 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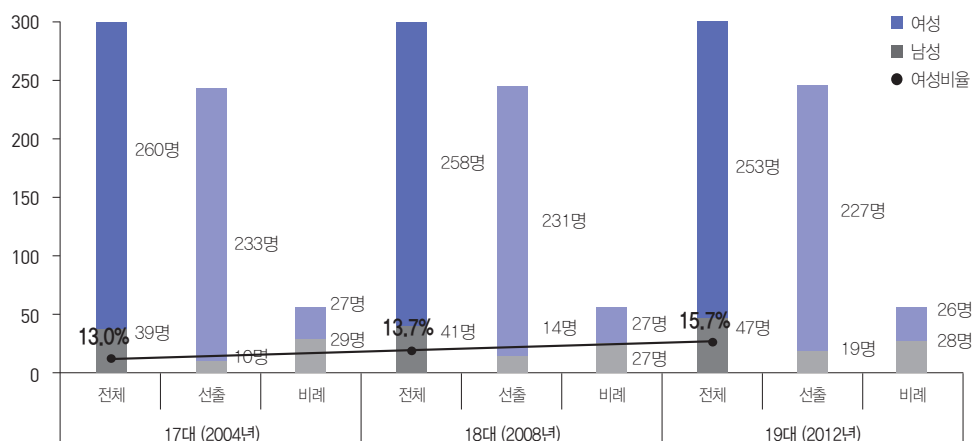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현재, 17부 5처 16청 5위원회로 구성됨.

- 17개 부처 중 여성가족부가 유일한 여성 장관이며 5처, 16청, 5위원회에서도 문화재청만 여성 청장으로 정부 조직 내에서의 여성대표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

- 2014년 6.4 지방선거(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에서의 여성 비율은 증가, 광역의회에서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함(0.5%). 특히 16개 광역의 경우 여성 기관장은 5·6대 모두 0%로 전무함.



[그림 1] 5·6대 지방선거 여성의원 당선 현황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²⁾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¹⁾

[그림 2]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00000000&topMenuId=CP&secondMenuId=CP>) R06, 자료 재구성, 검색일:2016.3.2)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www.nec.go.kr/portal/main.do>), 검색일:2016.3.2)

■ 할당제 15년, 아직도 낮은 수준의 여성대표성

•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참여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경로(fast track)' 중 하나로 약 100여개 국가에서 도입, 시행하고 있음. 여성 정치할당제는 여성이 자연 상태 그대로는 '정치'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도입된 장치임.

• 할당제는 그 적용시기와 방법에 따라 나누기도 하고, 유형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 등 분류기준이 다양함.

– '의석 유보제(의석 할당제; Reserved seats)'는 일정 비율의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로 일종의 당선 할당제임. 여성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거명부나 지역구를 지정해 의석을 배치하는 것으로 공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여성 중 누가 배치되는가가 중요함.

– '정당 할당제(party quotas)' 혹은 '자발적 할당제'는 정당이 자발적으로 정당 내에서 여성의원을 일정비율로 공천하는 것을 말함. 할당에 대한 비율이나 방법은 해당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정당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발전, 뿌리내린 유럽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음. IPU 자료에 따르면 '자발적 정당 할당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유럽을 중심으로 약 68개국 168개 정당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파악됨.

– '법적 할당제(legislative quotas)'는 「헌법」이나 「선거법」을 근거로 할당제가 적용되며 법에 '여성 할당'을 규정해 모든 정당이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임. 헌법에 할당을 위한 근거조항을 두는 국가는 프랑스, 르완다, 에콰도르 등 27개국이며, 선거법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는 약 67개 국가임.

■ 우리나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할당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여성의무공천제 등을 도입, 수정, 안정화시켜오고 있음.

•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비례대표 후보에 30% 여성공천 의무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50% 여성할당(gender quotas) 의무화, 남녀교호순번제(zipper system), 지역선출직 30% 여성할당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있음.

• 현재 여성할당 규정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에서 규정하고 있음³⁾.

–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이나 등록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성할당제를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반면, 「정치자금법」에서는 여성후보 공천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보다 많은 여성 후보를 공천하도록 장려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의 여성할당 규정은 크게 여성후보자추천(제47조)과 위반시 벌칙규정(제49조 및 제52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치자금법」은 지역구 선거에서 여성할당 규정을 지킨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 추천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위반시 벌칙규정이 없는 대신 여성추천보조금제를 통해 여성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고 있음.

■ 할당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매우 낮은 수준임. 이는 실질적인 제재수단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이며 할당제 시행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국가들의 경우 이행에 대한 의무, 강행수단 등이 법률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었음. 예를들어 헌법으로의 강제나 프랑스와 같이 국고보조금 지급을 통한 제재 수단의 동원이 필요함.

• IPU에 따르면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30% 이상인 44개 국가 중 37개 국가에서 하나 혹은 다른 형태의 할당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89개국 중 111개국에서 유효한 다양한 형태들의 할당제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여성의 대표성이 낮은 상황에서 할당제는 아직도 유효한 제도임을 알 수 있음.

3) 김영일 · 이정진 · 조주은(201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정책보고서 Vol. 30.

2. 국외 현황

- 2015년 8월 현재, 전 세계 의원 중 약 22%만이 여성이며, 여성 국가 원수는 단지 11명뿐임. 정부의 수장도 불과 10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아직도 낮은 수준임⁴⁾.
- 약 190개국의 여성의원 평균 비율은 22.3%(2015년 8월 말 기준)로 나타났으며 하원 기준 시 여성의원은 22.6%, 상원의 경우는 20.6%로 나타남⁵⁾.
- 여성의원 30% 이상인 국가는 1995년 5개국에서 4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40% 이상의 국가는 1개 국가에서 13개 국가로 그 증가폭이 컸음.
- 1976년 '남녀의 동등대우를 위한 지침(Equal Treatment Directive)'을 채택, 이후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 결정된 성 주류화 전략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면서 유럽

국가들은 정책결정과정에 남녀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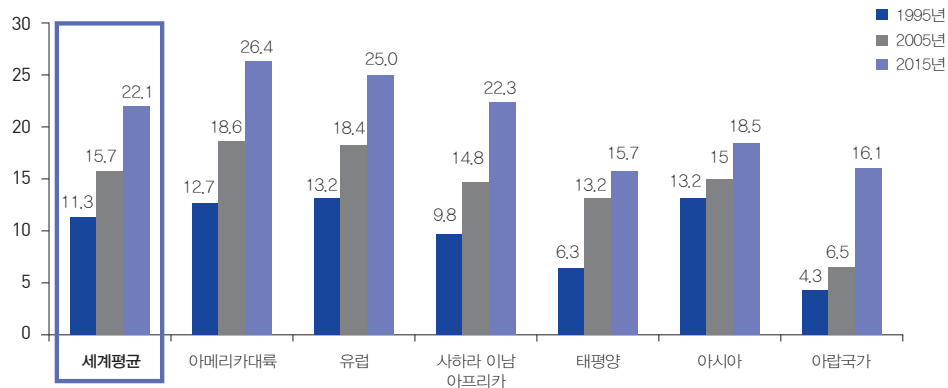
-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채택된 '베이징 행동 강령'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문제'가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여성의 세력화를 목적으로 북경행동강령에 합의함. 특히 선출직에서의 동등비율의 참여 등 의사결정과정에의 평등참여를 통해 젠더 균형을 강조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방해물을 제거하도록 제시함.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은 할당제 적용에 있어 강력한 근거를 제공함. 이에 따라 전 세계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995년 11.3%에서 2015년 22.1%로 두 배가 됨.
- 주요 대륙을 통해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여성의원 2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한 상황임. 가장 두드러진 증가는 아랍 국가(약 3.75배)들에서 나타났으며, 아시아가 가장 적은 증가세를 보였음.

〈표 1〉 주요국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 및 선거제도

순위	국가	여성 정치참여비율(%)	선거제도	자발적 정당 할당제	입법 후보 할당제	헌법적 할당제	선거법
1	르완다	63.8	비례		○	○	○
5	스웨덴	43.6	비례	○			
14	스페인	41.1	비례	○	○		○
15	노르웨이	39.6	비례	○			
17	벨기에	39.3	비례		○		○
22	네덜란드	37.3	비례	○			
26	독일	36.5	혼합	○			
28	아르헨티나	35.8	비례	○	○	○	○
42	이탈리아	31.0	비례	○			
44	오스트리아	30.6	비례	○			
48	영국	29.4	다수	○			
58	프랑스	26.2	다수	○	○	○	○
60	캐나다	26.0	다수	○			
111	한국	16.3	혼합		○		○

※ 출처 : CFWD(2015), 'Quotas in Parliamentary Elections' 및 <http://www.ipu.org/wmn-e/classif.htm>를 중심으로 재구성

• 의원비율은 2016년 2월 첫째 주 현황을 중심으로 구성함.



[그림 3]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 : 세계 평균 및 대륙별 평균 변화 추이(1995 - 2015)

※ 출처 : IPU(2015), 'Women in Parliament : 20 years in review'

4) <http://www.unwomen.org/en/what-we-do/leadership-and-political-participation/facts-figures>, 검색일: 2016.02.25

5) 출처 : <http://www.ipu.org/wmn-e/classif.htm>, 검색일: 2015.2.25

III 여성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한 국외 사례

1. 법을 통한 정치대표성 확대

- 르완다는 전체 의석 중 63.8%가 여성의원으로 여성 국회 의원 비율 세계 1위임.

- 르완다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헌법 제정 시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르완다 헌법 9조 4항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을 보장해야 한다.

- 프랑스는 헌법을 통해 선출직에서의 남녀 동수를 선언하고 선거법을 통해 구체적인 여성할당 규정을 마련함.
- 2000년 선거법에 '남녀동수 후보공천 조항'을 추가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짐.
- 프랑스는 1982년 이후 한 성이 7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선거법이 제시되었으나 남성에 대한 역차별 논란으로 진전이 없었음. 이후 1999년 헌법 개정 후 '남녀동수제(빠라테법 : parité law)'를 도입함. 프랑스의 경우 하원의원 선거 시 남녀동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당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를 삭감하도록 하는 강제수단이 실시됨. 반대로 할당을 지킨 정당의 경우 장려금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어 삭감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음. 결과적으로 상원, 시의회, 시와 지역 집행부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동수법이 적용되었음.

프랑스 헌법 1조

직업적·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선출직에도 남녀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

- 프랑스는 남녀동수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013년 1월, 남녀평등최고회의(Haut Conseil à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를 출범시켜 양성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가능케 함. 특히 대통령령과 총리령으로 세부 규칙을 정하고, 정치만이 아닌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음.

- 대만 역시 헌법에 '여성당선허당보장제도'라는 규정을 두고 각종 선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화민국 헌법 134조

각종 선거 중 반드시 여성의원 당선 수를 규정하고 그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 선거법 개정에도 여성의원 의원 수 이상 당선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여성 전용 선거구제 실시를 통해 여성 정치 신인의 진입을 용이하게 도와줌.
- 아르헨티나는 할당제와 관련해 정치 환경변화에 따라 변동을 경험함.
- 1947년 페론정부에서 여성의 권리와 정치참여가 확대되었고, 선출직에서의 여성의원 당선 비율이 30%에 이르렀음. 그러나 1980년대 여성비율이 4%대까지 떨어지면서 90년, "소수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을 변화시키고, 다수 여성의 정치참여는 정치를 바꾼다."라는 목표 하에 여성 정치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1993년 당선 가능 범위에 여성후보자 배치 법령이 공포된 후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07년 선거에서는 40%를 넘는 효과를 거둠⁶⁾.
- 「선거법」 제60조는 '비례대표 명부 작성 시 여성후보의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이들을 당선 가능한 순번에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는 접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여성할당제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고 있음.
- 대다수 국가에서 할당제를 법으로 시행 한 후 여성의 정치대표성이 급격히 증가했음.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할당제 실시 이후 여성의원들의 비율이 오히려 감소해 정치문화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줌.

6) 서경교(2008), '중남미 여성의 정치참여: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12(3).

2. 정당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확대

■ 스웨덴(입헌군주제)은 ‘두 명당 한 명꼴로 여성을’이라는 뜻의 ‘바르안난 다메르나스(Varannan Damernas)’를 1990년대부터 시행한 후 정치를 넘어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 대표성 확대가 뿌리를 내림. 80년대에 할당제가 도입되었으나 여성의원 확대가 목적이 아닌 정치참여 확대에 대한 정당성 확보 때문에 실시되어 타 국가들과 제도 도입의 목적과 활용에서 차이를 보임⁷⁾.

• 스웨덴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 자발적으로 여성명부를 작성하고 각 정당들의 자유로운 논의속에서 정당 상황을 고려한 자발적인 형태의 할당제를 적용함.

■ 독일(의원내각제)⁸⁾은 자발적 정당 할당제(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취하고 있고, 헌법에 할당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남녀평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독일의 기본법 제 1장 기본권 제3조 법률 앞에서의 평등

- ① 모든 인간은 법률 앞에서 평등하다.
- ②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 국가는 남녀평등의 실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에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자발적 할당제를 취한 유럽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개인의 자유, 평등을 넘어서서 남녀평등을 헌법을 통하여 특별히 도입하려 하고 있다.

• 독일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제도는 물론 생활 정치와 제도적 정치영역에의 진입을 위한 여성정치 교육을 정부기관 및 다양한 사회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음. 주목할 부분은 독일의 여성 정치참여는 정당의 자발적 여성 할당제의 도입으로 추동되고 있다는 점임.

– 사민당, 녹색당에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여성의 당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4순위까지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음.

■ 영국(입헌군주제)의 노동당은 여성선거인명부(All Women's Shortlist) 도입을 통해 50:50 후보자 공천 비율을 ‘달성 목표’로 제시함. 2015년 5월 총선 결과 여성의원 비율이 42.6%에 달함(김원홍 외, 2015).

• 영국은 비례대표제 없이 단순다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거제도의 경우 법적 할당제 없이 정당의 내부 규칙만을 바탕으로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이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할당제보다 정당의 의지나 정치·문화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줌.

• 1997년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 후보에 여성으로만 후보자 명단을 작성한다’는 선언 이후 여성 의원의 대폭 진입이 이뤄졌으며, 할당제 폐지이후에도 여성의 의회진출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

• 영국에서 할당제 도입이 늦었던 것은 영국이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아직까진 후보자 개인의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성 대표성이 낮은 상황임.

■ 노르웨이(입헌군주제)는 1974년 자유당에서 처음 할당제를 도입한 후 현재 4개의 주요 정당에서 시행중이며, 정당 별로 자유롭게 적용됨. 특히 노동당의 경우 남녀 한쪽이 40% 이하로 입후보자를 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별로 할당제의 적용이 자유로움을 알 수 있음.

■ 핀란드(대통령제)는 의회 또는 지역 의회들을 위한 할당제가 없음. 하지만 2000년 평등법에서 모든 공공 위원회와 모든 지방자치기관들(의회를 제외하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최소 40%의 비율을 가지도록 요구하고 있음.

7) 김원홍·김복태·김혜영·전선영·김은주(201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관련 선거법·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 양민석(2014), ‘독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여성정치교육’, 인문연구, (71), 407-436,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 남녀동수 내각

■ **남녀동수는 할당제와 달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에서도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현가능성에 있어 어려움이 큰 상황
이므로 해외에서도 주로 선출직에서보다는 정부조직, 즉 임명직에서 더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로 '동수를 통한 평등(equity by parity)', 50%의 참여를 여성의 당연한 권리로 제시하고 있음.

■ **세계 여성장관비율은 17.7%(2015년 12월 기준)로 지난 2014년 17.2% 인 것에 비하면 약 0.5% 증가함.**

• 지난 2014년 IPU와 UN Women이 발표한 '2014 세계 여성정치인 지도'에 따르면 여성 장관 비율 순위에서는 니카라과(57.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스웨덴(56.5%), 핀란드(50.0%)가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대륙별로는 아메리카(22.9%), 아프리카(20.4%), 유럽(18.2%) 순으로 여성 장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레바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에는 여성 장관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 **국가별로 남녀동수 내각의 현황을 살펴보면**

• 핀란드는 2003년 애페넨매기 총리가 처음으로 남녀 장관 수가 같은 내각을 구성했으며, 2007년 집권한 마티 반하넨(Matti Vanhanen) 총리가 제2기 내각에 60%인 12명의 여성장관을 임명함⁹⁾.

• 칠레에서의 남녀동수 내각은 2006년 최초의 여성대통령 미첼 바첼레트가 남녀 각 10명씩 내각을 구성한 것에서 시작함¹⁰⁾.

• 2008년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총리(2기)가 17명 중 9명의 여성 등용으로 '여초 내각'을 구성함.

– 31세의 최연소 평등부 장관인 비비아나 아이도 장관, 스페인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인 37세의 카르메 차콘 두 장관은 성별과 연령 두 부분에서 세계적인 이슈가 됨.

• 프랑스는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정부가 15명의 장관 중 7명이 여성을 임명해 장관 숫자로는 거의 '남녀동수'의 내각을 이루었음. 이후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남녀 각 17명씩 임명해 동수내각의 공약을 실현함.

• 호주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줄리아 길라드 총리가 9명의 여성 각료를 임명한 바 있으며, 뒤를 이은 케빈 러드 총리 역시 여성 각료 11명이 포함된 새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여성 각료 수가 가장 많은 내각을 구성한 바 있음.

• 이탈리아 렌츠 총리는 2014년 최연소 총리로 집권을 시작하면서 16개 부처에 여성 장관 8명을 임명함.

• 올 초 이슬람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가 22세 여성 장관을 임명해 세계의 주목을 끈 바 있음. '남녀 동수'는 아니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중동 이슬람권에서 여성 장관 비율이 3분의 1에 육박한 것은 놀랄만한 일 임.

• 캐나다는 쥐스탱 총리가 선거 공약 시 제시한 바대로 15명씩 기용, 캐나다 최초로 남녀동수 내각을 구성함.

– 트뤼도 총리는 '동등한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Because it's 2015)"라고 답해 동수내각이 시대적 흐름임을 제시함.

■ **영국의 경우 제러미 코빈 당수가 그림자 내각의 50%를 여성으로 지명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주요직은 남성으로 구성된 후 건강 · 경제 · 교육 · 국방 장관에 여성을 임명하는 등 여성 장관을 대폭 추가함.** 일각에서는 '여초 내각'이 아닌 할당제를 맞추기 위한 끼워넣기 식의 구성임을 비판하기도 함.

• 결국 내각 구성원의 수도 중요하나 어떤 정치를 하는가, 누구를 대변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임.

9) 일까 타이팔레(2010), 「핀란드가 말하는 '핀란드 경쟁력 100'」, 조정주 역

10) 여성신문, '세계는 지금 '여성내각 시대' (<http://www.womennews.co.kr/news/91188#.VIFGO0qweUk>, 기사일 : 2016.2.17; 검색일: 2016.2.18)

IV

여성 정치대표성 증진을 위하여

1. 법과 제도를 통한 여성의 정치대표성 확대

■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와 관련한 조항들을 수정·보완해 왔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 지역구 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권고조항에 불과하며, 지방의원선거에서도 30% 할당 위반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음. 할당제 도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등록무효나 선거보조금 삭감, 위반 시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제이행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함.
- 여성후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비례대표제의 확대 및 여성후보 확대가 모색되어야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혹은 여성할당의 필요성을 정당법이나 정치관련 법안에서 명시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동등한 기회보장, 결과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정당의 책무 강화

■ 여성의 정치참여, 나아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선 여성위원의 수적 증가를 위한 공천 확대, 젠더 정치를 위한 여성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함.

-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중요
- 상임위원회에서의 여성 위원장·간사 비율의 확대
- 정당과 여성 정치인에게는 다양한 교육 실시를 통해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함.

– 에밀리 리스트¹²⁾와 같은 여성 정치인 지원제도가 활발하게 적용 될 필요성이 있음.

– 정당 내 여성당직자, 인턴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이 정치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이를 통한 젠더 정치의 실현을 위해 젠더정치 교육 활성화, 여성 입문 기반 구축, 사회 문화전반에 걸쳐 정치가 남성에게 더 적합한 것임을 지워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함.

3. 성 평등한 국회조성

■ 2012년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는 'IPU 전략 2012-2017'을 통해 '더 나은 의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성평등 증진', '인권보호 및 증진' 우선과제로 설정함.

• 국제의원연맹의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 Gender-Sensitive Parliaments)' 이 제시되었으며, 참여의 평등 보장,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의회 업무 전반에 걸친 성 주류화, 성인지적 인프라 구축 및 의회문화 조성 등이 제시됨.

• 제127차 IPU 총회에서는 각국에서 성 평등한 의회를 만들어가기 행동계획(the Plan of Ac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성 평등 의회 행동계획'은 여성 참여 확대를 통한 평등달성, 성평등 입법 및 정책 강화, 성평등의 주류화 등 7개의 행동영역으로 구성됨¹²⁾.

■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정치대표성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 젠더 정치를 위해 실질적인 정치세력화의 파급력이 우리나라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봄.

〈집필 : 이선민 부연구위원〉

11) 에밀리 리스트(Emily's List)는 '초기 자금은 이스트(누룩)와 같은 것이다(Early Money Is Like Yeast)'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치후원금 모금하는 풀뿌리 유권자 조직임.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정치후원금 모집 조직으로 여성 후보자가 경험하는 정치자금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 1985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후 영국, 호주, 이탈리아로 확산된 엘리트 여성정치인들의 정치 진출과 여성유권자 운동이 잘 결합된 운동 여성정치 참여 운동임.

12) 김영일·이정진·조주은(201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과제', 정책보고서 Vol. 30